

민생 안정 최우선! 가짜뉴스 엄단하고, 물가 안정 총력 대응

- 경찰청에서 가짜뉴스 대응 T/F 회의 주재, 무관용원칙으로 엄정 대응 당부
- 남구로시장에서 장바구니 물가 점검 및 상인 어려움 경청

-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,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.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9일(목), 윤호중 장관이 경찰청과 남구로시장을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현황과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.
 -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한 데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다.

<허위정보 유포는 중대 범죄,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방문>

- 윤 장관은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‘가짜뉴스 대응 TF’ 회의를 주재한 뒤, 대응 전담 부서의 가짜뉴스 삭제·차단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 - 윤 장관은 “중동전쟁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유포되는 가짜뉴스*는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,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행위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* “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”, “종량제 봉투 가격인상”, “정부 달러 강제 매각 실시”, “4대 시중은행 환전규모 제한” 등

- 아울러, 중동전쟁을 빙자하여 항공편 취소 및 재예약, 중동 난민 성금 모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·스미싱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당부하였다.

<남구로시장 상인들과 소통, 전통시장 물가 점검>

□ 이어 윤 장관은 구로구 소재 남구로시장*을 방문해 서울시와 구로구 등 지방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, 시장 상인회 등 현장 관계자들과 생활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* 구로구 상업지·교통요지·초역세권에 위치한 소생활권 중심의 전통시장, 1970년 개설, 점포 수 200여 개, 종사자 수 460여 명

-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“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”며, “지역 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과 함께 피해 기업·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·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○ 이어서 남구로시장에서 직접 과일 등을 구매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수준을 점검하고,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비·포장비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폈다.

□ 윤호중 장관은 “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행위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”며,

- “지방정부,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행정과	책임자	과 장	박성민 (044-205-31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식 (044-205-3104)
담당 부서	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	책임자	과 장	채경아 (044-205-3530)
		담당자	사무관	정유희 (044-205-3921)

